

# 학문, 국가권력 그리고 근대성

이종오 /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깊고도 긴 대학의 수난사

한 국사회는 아직까지도 주기적으로 공안사건이나 혹은 이념, 사상논쟁의 회오리에 휩싸인다. 1994년 8월 김일성 사망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사상과 이념을 둘러싼 혼란스런 논전을 목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조문파동에서 비롯하여 그후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검찰조사, 그리고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에 관한 일련의 발언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직·간접으로 대학의 학생, 교수 등 대학구성원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나

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학은 이념(Ideologie)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의 와중에 항상 놓여있었다. 이념을 둘러싼 대학 내지는 지식인의 수난사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인이란 원래 '불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으며 이러한 불온집단의 거처로서의 대학이란 역시 불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속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일찍이 발달한 서구의 대학들이 애초부터 일종의 성역과 자치의 특권을 누려온 데만 해서 전체와 전체주의 체제가 지배했던 비서구 많은 지역들의 대학 수난사는 특히 깊고 길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도 이런 대학의 수난사에서 불행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불온’한 지식인의 역사에서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근대 러시아에서 한 지식인, 시인 코로렌코(1851~1921)는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어떤 러시아의 작가가 죽었을 때 그는 저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강제노역에 처해진 적이 있었는가? 혹은 시베리아 유형을 받았는가? 혹은 감옥에 갇혔는가? 최소한 경찰 감시하에는 있었겠지?... 우리의 직업은 이렇게 죄많은 것인가 보다.”

특히 강한 학생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학에서 대학은 ‘반체제’의 온상이라는 혐의를 흔히 받아왔으며 이런 현상은 불행히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해』를 둘러싼 사법당국의 조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19세기 러시아의 지성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성사와 대학사는 국가권력과 갈등과 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길고 긴 이러한 갈등과 비극의 목록 속에서 최근의 두드러진 사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

기로 하자.

###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적당한 긴장관계, 사회 건강성의 징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지식인과 언론인이 ‘필화’를 입었으며 기타 ‘정치교수’라는 명목으로 해직 그리고 일부는 사상문제, 조직사건 그리고 간첩사건 등으로 연루되기도 하였다. 유신체제하에서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는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고문에 의한 치사가 확실시되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중앙정보부에서의 변사사건이었다. 그러나 언론 매체에의 논설, 칼럼 등의 기고가 아닌 학술논문이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에 오른 예는 희귀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1988년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엄에서 서관모 교수가 발제한 “중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위치”가 수사대상에 떠오른 것은 전례없는 일이었다.

1988년 당시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80년대 민주화운동,

특히 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정신과 분위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다. 88년의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엄도 이런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심포지엄 발제논문의 대다수는 소위 ‘민주변혁’의 목적의식 아래 쓰여진 것이었다. 문제가 된 서관모 교수의 논문도 물론 이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당시의 진보학계는 1950년대 이래의 분단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비롯한 여타 진보적 사상과 방법론을 구사하여 연구 및 발표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과 방법론은 분단시대의 반공주의의 정신과는 분명히 상치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과 방법론은 분단시대의 반공주의의 소산인 문제 많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때때로 떠오르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여기에서 지금은 벌써 시대적 회고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한 80년대의 지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80년대는 아마 근현대 한국사에서 1945~50년 정도의 해방공간을 제외한다면 가장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념의 논의가 전개된 시기였을 것이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혁명운동과 혁명적 이념의 논의 자체가 이미 퇴조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동서양의 온갖 정치·사회사상이 활발히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 등 위시한 다양한 사회현실에서 실제로 추구되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도 당연히 제반 진보적 논의에 참여하고 개중에 일부 인사는 이런 진보적 혹은 급진적 논의를 이끌어 가는 '선진이론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국에서 지식인과 가장 큰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교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수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간에 실천운동과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고, 특히 80년대의 상황은 대학교수 집단에 대하여 현실에 대한 발언과 나아가서는 행동까지도 피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위 '순수학문' 혹은 '순수학술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과 의 경계가 무엇이며 그리고 개인적, 집단적으로 이러한 경계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존중해야 하는지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문제였다. 문제가 된 서 교수의 논문은 학술단체가 주관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순수 학술논문이었다. 그러나 '순수'라는 말의 의미를 실천과 분리된 그리고 실천의 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소위 '상아탑'이라는 울타리 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면 이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순수 학술논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판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실천 내지는 현실과 분리된 '상아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실천이나 현실에의 적용을 도외시한 어떠한 사회과학 이론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논문이 과연 '학술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혹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논문이 '순수 학술논문'이냐를 따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어떤 논문이 '순수 학술논문'이면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고, 이것이 '순수 학술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사실 성립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 교수 사건에서 문제를 삼은 것도 순수나 비순수냐가 아니라 서 교수 논문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등의 공안관계 법률이 제시하는 국가가 허용하는 자유사이의 갈등이다.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나치주의와 스탈린주의로 나타난 바 있는 이러한 완전한 국가와 사회란 결국 이후 역사에서 전체주의의 허구로 나타난 바 있다. '안보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가와 한국지식인 사이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다행스럽게 끊임 없는 긴장관계가 있어왔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서 교수 사건은 결국 80년대라는 달라진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그리고 문화·이념적 지형 속에서 사상과 학문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지식인들과 이러한 움직임을 '불온한' 것으로 불안하게 쳐다본 국가권력 사이의 밀고 당기기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권력과 이에 맞서서 시민적 자유의 한 영역을 확장하려는 사회세력과의 밀고 당기기 끝에 유아무야로 처리되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바는

80년대의 지식인과 사회운동은 분단시대하에 조성된 비좁은 사상과 학문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혀나갔으나, 공안당국으로 표현되는 국가권력이 87년 이후의 비교적 안정된 정치정세 속에서 이러한 영역을 다시 축소, 탈환하려는 와중에서 일어난 일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사건은 그 후 다시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사건으로 일어난다.

1991년 6월에 공안당국은 서관모 교수 등이 주요 멤버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 구속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서사연의 소장을 위시한 주요 간부 중의 대다수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현직 교수들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현직 교수가 아닌 석·박사 과정의 연구원들이 실형을 언도받게 됨으로써 서 교수 사건과 달리 국가권력과 지식인 세계의 밀고 당기기가 유아무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서사연은 소위 PD(민중민주주의) 이론을 주창하고 이를 『현실과 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전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서사연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였기는 진보적 입장의 학술단체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대표적 탄압사례로 손꼽힌다. 서사연 사건은 서관모 교수 사건과 같이 진보적 혹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연구 및 연구 결과의 주장이 한국사회에서 으레 탄압받는 실상을 나타낸다.

한국사회에서는 80년대까지 그간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시각과 입장에서의 연구와 주장은 제한없는 자유를 누렸음에 반하여 사회주의를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은 학계와 사회에서 지적 시민권을 갖기가 힘들었다. 이런 지적 사회적 풍토는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더 나아가서 사회의 정신생활 전반을 제한하였으며 한국사회는 아직 이런 지적 정신적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 정신적 제한과 제약에서 수십 년을 보낸 결과 80년대에 이루어진 세계적 국내적 격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철학의 빈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회

주의의 이론과 역사는 사회주의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근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의 자유로운 연구 및 토론을 봉쇄할 때에 이는 결국 지적 풍토의 빈곤과 황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 교수 사건이나 서사연 사건의 비극성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이런 후진적 사상, 학문의 통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재확인에 있다. 80년대의 젊은 지식인들을 매료시켰던 이론과 실천의 결합, 민중운동과의 결합 등의 시대적 흐름은 당연히 많은 대학의 연구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과 활동의 영역을 대학 내부에로만 한정하지 않게 하였다. 특히 노동문제 등 현실의 사회갈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실 운동과의 접합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국가권력과 갈등의 소지가 있게 된다. 이런 사례가 93년에 발생한 울산대 조국 교수의 '사노맹' 관련 사건과 94년에 발생한 충

북대 유초하 교수의 '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배령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의 이해』 를 둘러싼 사상과 학문의 자유

1994년 8월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법당국과 지식인 사회의 공방전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로 인한 국가와의 긴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우선 이는 어느 한 교수의 한 논문이 아니라 9명의 교수에 의해서 작성된 십수 편의 글이 담겨진 책이 문제가 되었으며, 더구나 이는 서사연 같이 연구서클의 저작물이 아니라 경상대학교 교수진에 의한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었다. 더구나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은 30여 년 만의 문민정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 사건도 88년의 서 교수 사건이나 혹은 91년의 서사연 사건

과 같이 이 저작에 들어있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이 주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및 지식인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서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거센 대응에 의하여 이 사건은 그 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에 즈음하여 제기된 지식인 사회의 주된 논지는 어떤 학문적 방법론이나 이론의 옳고 그름, 현실성의 유무는 지식인 세계와 학계의 자체 토론과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지 공안당국의 잣대가 이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지로 89년 이래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사태에 즈음하여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 세계의 내부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제반 정치·사회이론의 수용 및 한국 현실에의 적용을 두고 많은 비판적 토론이 전개되었고, 현재도 이 토론은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공안당국이 어느 특정한 사상체계에 관한 학문세계의 내부토론에 개입할 시 이는

더 이상 학문세계의 자체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최소한 극히 곤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어느 사상체계에 관한 과학적 인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러한 사상, 학문의 영역에 관한 사법당국의 개입에 관하여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매번 제기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사상, 학문 나아가서 언론, 결사 등 사회, 정치생활 일반에 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타당성 여부와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자체에 관한 문제가 이와 관련하여 떠오른다. 국가보안법의 잦아들 모든 저작물과 사회, 정치토론에 적용할 때에 거기에는 매번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이 사회의 지적 정신적 자유를 황폐화시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겠다는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결국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불가능해진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말썽많은 국가보안법은 1925년의 치안유지법을

기원으로 하여 해방후 군정, 이승만 정권을 거쳐 완성된 법률인데 이 법이 1994년의 오늘에 이르러서도 사상, 학문의 문제를 제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 것인가는 심각히 따져보아야 하겠다.

### ‘주사파’ 발언을 둘러싼 파문

『한국사회의 이해』를 둘러싼 사법당국과 학계의 갈등이 아직 진정되기 이전에 한국사회는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에 관한 발언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이념 논쟁에 휩쓸렸다. 한국사회의 각계에 '주사파'가 존재하고 현직 대학교수 중에 해외유학 시절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폭로'는 한국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총장의 발언의 근거를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북의 장학금을 받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촉구한 비판적 반응이 당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

적으로 박 총장의 발언을 용기있는 대학 총장의 발언이며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식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도 있었다. 이는 94년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의식의 확산과 김일성 사망 이후의 조문 논쟁의 연장 속에서의 통일, 사회이념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대립구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주사파 논쟁은 어처구니없게도 1994년 10월 5일 현직 교수 3인이 해외유학중 북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긴급구속되는 사건과 연관지어졌다.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를 위시한 3인이 북한 장학생인 듯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일의 조사 이후 근거 없음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안기부에 의한 긴급구속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은 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 국가와 지성의 전근대적 갈등관계는 지양되어야

백낙청 교수는 최근 그의 지론인 '분단체제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분단상태에서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존속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지성은 해방 이후 50여 년에 걸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이념적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정치 체제 아래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성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지성은 모두 왜곡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념적 광기의 소산물이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지성은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통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제약 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성의 왜곡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

며 그것은 80년대에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지성이 세계적 보편성을 갖춘 상태에 이를 때에만 진정하게 식민지시대, 분단시대가 극복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진정하게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제는 정치적 지리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단의 해소 과정이 그대로 식민지, 분단시대에 이루어진 한국의 문화와 지성의 왜곡이 극복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내부에서의 진정한 근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정치적 지리적 통일 이후에도 분단시대 혹은 분단체제는 존속할 수 있다.

한국의 지성이 후진성을 극복하여 진정하게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상아탑'이나 연구서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전 사회적 근대화의 과정과 보폭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는 전 근대적 현상은 한국의 국가와 사회의 현재의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 이런 전 근대적 정치, 사회 관계가 한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끊임 없는 국가권력과 갈등과 긴장 상태하에 놓여있게 하였고 할 수 있다. 바로 최근의 정현백 교수 등의 안기부 연행 사건이나 경시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국가권력의 학문세계에의 직접 개입이나 혹은 지식인에 대한 정치적 불신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거기다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소위 '국제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면서 대학사회에도 이를 무절제하게 적용하려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담론은 새로운 압력 수단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에도 공안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의 물리적 힘이 대학과 지식인에 대한 통제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경쟁에 의한 선별이라는 시장원리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자는 혹은 대학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도태'되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한 논리가 대학의 '구조조정'에 적용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변하여야 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그동안 너무나 수많은 졸속 관치행정을 경험해 왔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개혁의 논의를 불안하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도 무소불위의 국가가 주관하고 주체가 되어 대학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사회와 시민사회의 토론과 자율적 합의에 의

하여 이런 큰 문제가 풀려나가는 선진적 방식이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 자문해 본다. 어쨌건 경쟁력 강화와 경쟁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발상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이런 면에서 '국제화', '개방화'라는 담론이 내포하는 의미를 예의 지켜보아야 하겠다.

별로 길지 않은 한국의 근대 지성사를 점철해온 국가와 지성의 후진적 갈등 관계가 지양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한 영역으로서의 대학과

지식인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하여 대학인을 포함한 한국의 지식인은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

이종오/서울대학교 상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말부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회장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탈냉전시대의 대학과 대학문화",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 외 다수를 발표했다.